

6000종 서식 DMZ, 생태 보전 본격 추진

최준영기자 cjy324@munhwa.com

환경부, 훼손지 복원 나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약 6000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생태계의 보고'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보전 강화 대책 등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DMZ를 생태계 조사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해당 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 기본계획안 마련, 보호지역 지정 확대 및 훼손지 복원 등 작업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남북 간 긴장 고조 등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른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목표대로 원활히 정례적 생태계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DMZ 일대에 대한 생태계 조사 및 보전 강화 대책안을 수립, 올해부터 △생태계 조사체계 강화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제도 마련 △보호지역 지정 확대 및 훼손지 복원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에 속도를 낸다.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으로 약 70년 간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아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DMZ 일원을 둘러싸고 최근 개발·이용 요구와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현재 DMZ에는 두루미, 산양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한반도 생물 종의 23.5%인 약 6000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2009년 중·서부지역 이후 10년 이상 생태조사가 중단됐다가 지난해에야 동부지역 조사가 일부 진행되는 등 사실상 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군사분계선(MDL·휴전선) 남방 10km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쪽 지역에 대해선 2015~2020년 생태조사를 진행, 멸종위기종 44종을 포함해 총 4315종의 생물을 확인했다.

환경 당국은 안정적인 DMZ 출입 및 현장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유엔군 사령부와 올해 초까지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DMZ를 생태계 조사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